

북한 화폐개혁 실패의 원인과 영향

조 한 범

(남북협력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북한이 화폐개혁을 단행한지 두 달이 경과하고 있다. 아직 최종적인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나, 북한 당국이 의도했던 효과들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화폐개혁 실패에 대한 전망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전격적인 조치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들이 관측되고 있다.

북한 화폐개혁의 의도는 여러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지배력 확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성적 경제위기의 해소를 위해 북한은 그 동안 일부 시장의 기능을 암묵적으로 인정해왔다. 그 결과 북한의 시장은 지하경제와 생존경제가 혼합된 형태이기는 하지만 계획경제의 문제를 일부 해소하며 확장해 왔고, 북한주민의 생활경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북한당국은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할 경우 경제적 통제력 약화는 물론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부담이 될 것을 우려, 시장을 무력화하고 공식경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화폐개혁을 단행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화폐개혁은 성공하기 어려운 몇 가지 부정적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화폐개혁은 북한경제의 위기가 생산 및 공급부족이라는 근본적 요인에서 비롯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분야에서 해법을 찾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북한당국의 대응은 이미 단행된 북한의 7.1경제조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북한경제의 위기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모순에서 비롯된 저생산성과 공급의 절대적 부족이라는 점에서 비롯되며, 이는 배급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직접적 원인이다. 따라서 생산성의 향상과 공급의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적절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생산의 자유화와 사유화를 골격으로 하는 조치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북한당국은 이 같은 근본적 처방을 도외시한 채 배급체제와 유통분야의 문제에 주목해왔으며, 화폐개혁 역시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배급과 유통 분야에 국한된 조치들은 단기적 충격효과 이후에는 생산과 공급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들이 다시 다양한 형태로 재연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는 7.1조치에 이어 화폐개혁이 북한에서 성공할 수 없는 한계를 말해준다.

또 하나의 문제는 화폐개혁은 북한당국이 의도하지 못한 정치, 사회적 파급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그 동안 북한에서 영역을 넓혀왔던 시장은 북한주민들의 생존경제차원의 적응방식이었다. 북한공식경제가 주민들의 의식주를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의 지속은 공식경제의 신뢰도 추락과 아울러 주민들에게 자구책 마련을 강요했으며, 시장이 그 출구였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점에서 화폐개혁을 통한 북한당국의 시장에 대한 전격적이고도 강제적인 개입은 북한주민들에게 좌절과 아울러 체제와 당국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가지게 한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있다. 이번 화폐개혁 조치로 북한당국과 공식경제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신뢰도는 현저하게 낮아지게 될 것이며, 이는 북한주민들에게 잠재해 있던 체제에 대한 은유

적 저항이 점차 현재화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시장과 연계된 당 간부들 및 소위 큰 손들 그리고 비호세력들은 화폐개혁을 미리 감지하고 대응책을 강구했을 가능성이 큰 만큼 기층민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불만은 북한사회의 갈등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는 사회성원들의 심리적 상태가 혁명과 사회변화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데이비스(James C. Davis)의 이론을 상기하게 만든다. 즉 사회변동은 절대적 빈곤이나 위기의 상황보다는 기대가 상승하는 국면이 좌절될 경우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공식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주민이 선택한 시장에 대한 북한 당국의 전격적이고도 강제적인 개입은 북한주민들의 집단적인 심리적 좌절감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향후 북한 사회변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화폐개혁이후 북한주민들의 저항 및 불만은 과거와 달리 체제와 지도자에 대해 보다 직접적 형태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생산과 공급의 확대를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조치들이 수반되지 않는 한 화폐개혁을 통해 북한당국이 의도했던 효과들은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전과 같은 형태의 문제들이 반복될 것이며, 식량위기도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 지배엘리트 내에 화폐개혁 평가를 포함한 경제노선 갈등도 예상할 수 있으며, 이는 후계체제구도 형성과 맞물려 북한 지도부내의 원심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점에서 북한 화폐개혁은 몇 가지 위험성을 지니고 있으며, 단순히 경제영역에 한정해 해석하기 어려운 이유들이다. 북한당국은 지속되는 공급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외부로부터의 수혈’이라는 과거의 방식에 집착, 강·온을 오가는 갈지자형의 대남, 대미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경제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보장될 경우 파격적인 대외정책구사도 예상할 수 있다. 논의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은 이 같은 북한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건은 과거와 달리 남한과 미국을 설득할 만한 북핵폐기 프로그램을 북한이 제시할 수 있는가이다.

북한이 충분한 외부로부터의 수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일시적,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시장화 기조를 토대로 생산과 공급확대를 위한 근본적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는 한 북한경제의 구조적이고도 반복적인 문제들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시장화의 유도를 위해 남한과 외부세계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이유이며, 북한 화폐개혁의 경과를 조심스럽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